

‘당권 도전’ 민주 박찬대 의원, 전북자치도민에 지지 호소

“전북을 미래성장 중심지로 만들 것”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지역균형발전 전략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등 3가지 청사진 제시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권 재창출 디딤돌 될 것”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전 원내 대표)이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 회 브리핑룸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전북을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이날 “K-문화와 에너지가 진짜 소득이 되는 전북을 열겠다”고 하며 “소외의 땅이 아닌, 성장의 심장으로서 전북을 열겠다”며 당원들과 도민의 마음을 두드렸다.

기자회견의 시작은 이정진 전북특별자치도위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호남권 순회 일정 중 전주를 첫 일정으로 택했다며 “한옥마을, 국립무형유산원, 소리문화의전당 등 전주의 깊은 문화적 자산을 체감했다”며 운을 폈다.

그는 이어 “전북은 오랜 기간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소외되고, 호남 내부에서도 우선순위에 밀렸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그러나 이제 전북이 ‘소외의 상징’에서 ‘성장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때”라고 강조했다.

▲전북을 위한 3대 약속... “문화·교통·에너지, 새로운 전환의 삼각축”

박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성장을 위한 ‘세 가지 확실한 약속’을 밝혔다.

첫 번째 약속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전폭 지원이다. 박 의원은 “48년 만에 도전하는 하계올림픽 유치가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당의 역량을 총결집하겠다”며 “국가 차원의 경기장 건설과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때 비현실적으로 여겨졌던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 성공이 더 이상 꿈만은 아니라는 희망을 던졌다.

두 번째로는 교통 인프라 혁신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를 제3차 고속도로 계획에 반영하고, 호남고속철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화 추진, 서부내륙고속도로 익산 구간 조기 개통 등 전방위적 교통망 개선을 통해 전북을 수도권과 맞닿은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세 번째는 K-문화 콘텐츠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전북의 핵심 성장 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박 의원은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심장이다. 이 유산을 활용한 K-문화 산업 육성과, 풍부한 자연 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문화와 에너지가 소득이 되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섬기는 리더십으로 정권 재창출의 디딤돌 되겠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8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을 미래 성장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당대표로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최우선으로 두고, 총선·대선을 함께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압승과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모든 구성원이 성공하는 팀, 함께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며 “섬기는 리더십(서번트 리더십)으로 당을 통합하고 국민과 가까운 민주당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을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내란 특검법을 제정해 내란 세력을 철저히 단죄, 다시는 민주주의를 침탈하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주장했다.

▲당대표 경선 본격 돌입... 7월 26일 호남 순회 투표

한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10일 후보자 등록을 받아 7월 16일 총청권을 시작으로, 26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호남지역 투표가 치러지고 27일 마지막 수도권 경선에서 당락이 결정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권리 당원 투표 55%, 대의원 15% 일반 국민 30%가 반영되는 만큼 호남 지역 권리 당원이 전체 대비 33%나 되는 만큼 당대표 후보들이 가장 공을 들이는 지역이다.

이번 당대표 선거는 박찬대 의원과 함께 정청대 의원(전 법사위위원장)도 출마해 양강 구도를 형성, 치열한 경선전이 예상된다.

“전북에서 시작해,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박찬대 의원의 외침이 향후 전당대회에서 호남 표심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또 어떤 반향을 불러올지 매우 주목된다.

/이만호 기자

세관 수사권 확대 추진
무역 악용 경제범죄 근절

민주 박희승 의원, 세관공무원
사법경찰관 확대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무역거래를 악용하는 경제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세관공무원의 사법경찰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무역교란 경제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범죄 및 이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범죄를 통합 수사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인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와 외환거래 규제 완화 등 무역환경 변화를 악용하여 수출입 물품 가격을 부풀려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해외 위장회사를 통한 가장무역으로 주가를 부양하는 등 불공정 무역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정당한 무역행위를 가장한 투자자금, 무역금융, 건강보험금 편취 사기 및 법인 자금 횡령 등 재산범죄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관에 적발된 불법영득 목적의 경제범죄 규모는 약 1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세관의 수사 권한은 밀수, 관세포탈, 불법 외환거래 등 직접적인 세수 확보나 국경 보호를 위한 범죄에 한정되어 있어, 무역범죄에서 파생되는 경제범죄에 대한 수사가 지연되거나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희승 의원은 “현재와 같은 분할 수사 체계로는 증거인멸, 범죄수익 은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무역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법률적 권한, 무역자료를 보유한 세관의 수사권을 확대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은 “무역을 악용한 경제범죄는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시장 왜곡과 대외 신인도 저하를 초래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나라 무역의 경쟁력과 투명성, 대외 신인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만호 기자



“피지컬시 국가전략사업 추경 확보” 8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피지컬시 국가전략사업 예산 확보’ 기자회견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정동영 국회의원, 산업계, 학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이번 피지컬시 추경예산 확보를 환영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올해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 16만8710건

지난해 12만663건보다 4만8047건 ↑... 도, 7~8월 중 신청자 자격 검증 거쳐 9월 최종 확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신청 건수가 16만8,710건으로, 전년도 12만663건 대비 4만8,047건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농민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 환경·경관 보전, 공동체 유지 등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북도는 지난 2020년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올해는 수당 지급 대상을 기존 ‘농가’에서 ‘농업인’으로 확대하면서 신청 범위가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여성 농업인, 가족 단위 청년 농업인 등 기존 제도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새롭게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신규 창업 농업인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소지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요건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되었다.

지급 금액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인 가구 6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30만원으로, 실제 농업인 수에 따라 가구별로 차등 지급된다.

도는 7~8월 중 신청자에 대한 자격 검증 및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권요안 도의원, 대아수목원 현장에서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권요안 의원은(완주2·더불어민주당) 8일 완주군 대아수목원에서 지역 주민 및 완주군 관계자, 산림환경연구원 등 20여명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산림환경연구원 황상국 원장의 대아수목원 조성 현황 및 확대보완조치 사업에 대한 보고로 시작했다. 이어 대아수목원 현장 방문과 질의응답을 통해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주민들이 제기한 건의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답변으로 실질적인 소통을 이끌었다.

주민들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금

남화 자연관람지가 크게 훼손되어 겨우 명맥만 유지되고 있고, 각종 등산로는 물론 편의시설까지 낡고 접근성이 떨어져 수목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방문객들이 외면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은 현재 대아수목원 내 방각이 예전에 비해 1/3로 줄어 큰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은 △수목원 관리주체 완주군으로 이양 △수목원 진입로 확장 △급강화 생태 복원 △등산로 정비 및 전람차 수리 △열차버스 운영을 위



한 도로 정비 △제2주차장 신설 등을 요구했다.

권 의원은 “대아수목원에 대한 연차적 재정 투입을 통해 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 행·재정적 관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지역축제,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

도, 김제시 첫 시군 포럼... 자원순환형 축제 모델 공유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축제를 탄소중립 실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와 전북탄소중립지원센터(전북연구원)는 8일 김제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5차 전북 탄소중립 포럼’을 개최하고, 주민 참여형 자원순환형 축제 모델을 공유하며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전북 탄소중립 포럼’은 전북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민·관 협력의 장이다. 특히 이번 포럼은 도청이 아닌 시군 단위인 김제에서 처음으로 개최돼, 탄소중립 실천 논의가 지역 현장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친환경 축제를 통한 탄소중립 확산 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전북지방환경청, 포럼위원, 탄소중립지원센터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해 사례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표에서는 강해남 김제시 자원순환과장이 김제시 ‘새로보미축제’를 중심으로 한 자원순환형 축제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대화용기 사용과 음식물 쓰레기 저감 등 실천 중심

의 운영방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이성중 전북지속가능발전협의회 부장은 분리배출 교육, 재활용 체험 프로그램, 지역 연계 캠페인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자원순환형 축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확산 가능성이 크고, 주민 체감형 탄소중립 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임성진 포럼위원장(전주대 교수)의 사회로 시군 여건에 맞는 축제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 개발과 행정 간 협력 필요성,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한순옥 전북자치도 탄소중립정책과장은 “탄소중립은 행정만의 과제가 아닌, 주민과 지역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인 과제”라며 “전북도는 시군과 협력해 지역축제를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사례를 바탕으로, 각 시군 축제에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모델을 접목하고 후속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만호 기자

문화유산 지속 가능 관광자원화 방안 모색

남원시의회 문화유산관광발전연구회, 제주도 방문

남원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문화유산관광발전연구회’(대표의원 강인식)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도를 방문해 ‘2025 세계유산축전·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행사에 참석하고, 다양한 관련 기관을 견학하며 남원시 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화 방안을 모색하고, 핵심 프로그램인 ‘세계유산 글로벌 포럼’에 참여해 세계 각국의 유산 보존 및 활용 정책과 국제협력 사례를 청취했다.

특히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일본 아오모리현 환경에너지부 △중국 어메이징 풍경명승구 △유네스코 GRIPAC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유산의 보존과 활용의 균형, 지역공동체 연계하는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환경도시위원회(전반기 문화관광체육 위원)과의 간담회를 비롯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 △국가유산방문센터(향사당) △제주도립미술관 등을 방문 다양한 방안을 벤치마킹했다.

강인식 대표의원은 “남원의 문화유산이 살아있는 교육·체험·경제자산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